광주시, 무분별 고층 건축물 신축 제동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지정 … 스카이라인 체계적 관리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책,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정

광주시가 뒤늦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에 나섰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 전반에 대한 경관 심의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14일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해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지난 11월 9일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정(안)을 구체화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건축법에서 도로 폭의 1.5배 이하로 제한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이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삭제된 이후 발생하는 고층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업지역과 미관지구 내 가로(街路)로 둘러쌓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는 것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이다.

또 시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로, 아파트 부분의 연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600% 이내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포럼, 관련 단체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내년 중에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에 있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 전문초청강좌(3차례), 전문가 자문(5차례),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백봉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대중교통 불편 민원 크게 줄었다

전년보다 버스 30%, 택시 12% ↓

올해 광주시내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버스 민원은 535건, 택시 민원은 97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각각 30%(232건), 12%(125건)가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된 대중교통 불편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는 승강장 통과가 가장 많고 승하차거부, 불친절,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택시 관련 민원은 불친절이 가장 많고 부당요금, 승차거부, 도중하차, 합승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대중교통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모니터단 운영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친절교육 내실화 ▲친절·안전운전 캠페인 등 친절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친절한 운전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친절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운전원에게는 과징금과 함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또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사업 ▲버스 공영차고지·회차지 휴게실과 화장실 교체 ▲버스 운전원 식단 개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선진화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초 10년 연속 노사민정 '최우수' 단체 선정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노사민정 협력 사업을 하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 사업 성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심사했다.

전남도는 노사 갈등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와 결부돼 투자유치·기업 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 성과를 발표하면서, 보해양조의 고용 유지 사례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파업 해결 사례 등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전국 최초로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은 근로자, 기업체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도는 산업평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교육기부는 우리 모두의 아이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14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오는 17일 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년부터 전국 농촌에 '100원 택시' 달린다

82개 군 교통모델사업 실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 지역에 이른바 '100원 택시'가 달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 농업 분야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100원 택시'라는 고유명사가 상징적으로 붙게 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올해 대비 4.5배 수준인 32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의 적자 보전 및 지자체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성수 새광산발전위원장 출판기념회

장성수 (사)새광산발전위원회 위원장(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사진)이 14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자서전 '장성수와 광산'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위원장, 박인화 광산을 위원장, 박혜자 서구갑위원장, 임우진 서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장성수 위원장의 이 책은 제1부 광산이 광주의 미래다, 제2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제3부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 제4부 아름답고 즐거운 성장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판기념식은 퓨전국악공연으로 가요와 국악이 어울어지는 한마당과 기념식, '저자와의 즉문 즉답' 등으로 진행됐다.

장성수 위원장은 "어린시절과 공직의 삶을 진솔하게 저술했으며, 광산이 광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터전임을 감안해 가장 시급한 일자리분야에 초점을 맞췄다"며 "제2의 인생은 고향인 광산에서, 광산구민과 함께 출발 하겠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자동차 튜닝밸리사업 내년 본격 가동

영암서 선포식… 2024년까지 고성능 수제차 등 5개 국책사업 추진

전남도가 14일 국내 유일의 영암 F1경주장을 활용한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삼포자동차 튜닝밸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내년부터 튜닝밸리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다. 선포식을 전후해 전남도청에서 행사장까지 튜닝카 퍼레이드가 펼쳐졌으며, 영암 F1경주장에서는 튜닝카 시승식도 열렸다.

전남도는 F1경주장 인근 99만㎡에서 2024년까지 차 부품, 튜닝, 고성능 수제자동차 산업 등 5개 국책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두 5780억원의 국·도비를 들여 고가 시험장비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 장비동과 연구 지원동은 지난해 8월 준공돼 자동차부품 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가 입주했으며, 모헤닉모터스 등 11개 업체도 들어왔다.

튜닝 지원사업 시험 평가동과 기업 지원동이 내년 2월 완공되면 국내 튜닝산업과 고성능 자동차 부품단지다운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도는 앞으로 F1경주장 일대를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 기업 지원 기능이 집적된 튜닝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사업, 튜닝부품 실증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해 튜닝기업 100여 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정찬균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조선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튜닝 밸리 조성사업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튜닝산업이 전남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